

김승연 회장 폭행무마 7억원 썼다!

한화리조트 김욱기 감사가 5억8000만원 받아 ... 오씨 도피배후 의심

한화측이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 무마나 피해자 관리 또는 합의 등을 위해 쓴 돈이 최소 7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화리조트 김욱기 감사는 그가 보복폭행에 동원했던 mambo와 두목인 오모씨를 캐나다 출국 하루 전날 까지도 접촉했다는 정황이 잡혀 도피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보복폭행 사건의 누장·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월18일 구속한 김욱기 감사가 한화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5억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욱기 감사가 사건 직후인 3월9일부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까지 3-4차례에 걸쳐 한화 간부로부터 경찰 등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고 피해자 관리를 잘 하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용처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별도로 김욱기 감사의 주변인물 계좌 등으로 현재로서는 변호사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돈 3억원이 추가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전해진 돈 중에는 검찰이 김승연 회장 등을 기소할 때 한화 김모 비서실장이 김승연 회장 개인 돈을 인출해 김욱기 감사를 통해 mambo와 오씨에게 건넨 1억10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오씨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닌 만큼 김욱기 감사의 구속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화측이 피해자 합의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해 피해자들이 모두 찾아간 9000만원을 합치면 보복폭행 사건 발생 이후 한화와 김승연 회장 측이 사건 무마, 피해자 관리 및 합의 등을 위해 쓴 돈은 6억70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김욱기 감사가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과의 친분을 활용해 김승연 회장 측이 사건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김욱기 감사와 돈을 건넨 한화 간부를 상대로 자금의 출처는 물론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경찰 등으로 실제 돈이 흘러갔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오씨가 출국하기 전날인 4월26일은 물론 25일에도 김욱기 감사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서로 만난 것으로 보고 김욱기 감사나 한화측이 조직적으로 오씨의 도피를 도왔는지, 더 많은 자금이 건네졌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김욱기 감사는 일부 자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나머지 액수 수수 및 경찰 청탁이나 로비 여부, 출국 직전 오씨를 만난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욱기 감사 외에도 비서실장 김씨 등 사법처리를 미룬 6명을 상대로 자금을 김승연 회장이 직접 동원하라고 지시했는지,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캐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김승연 회장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19>